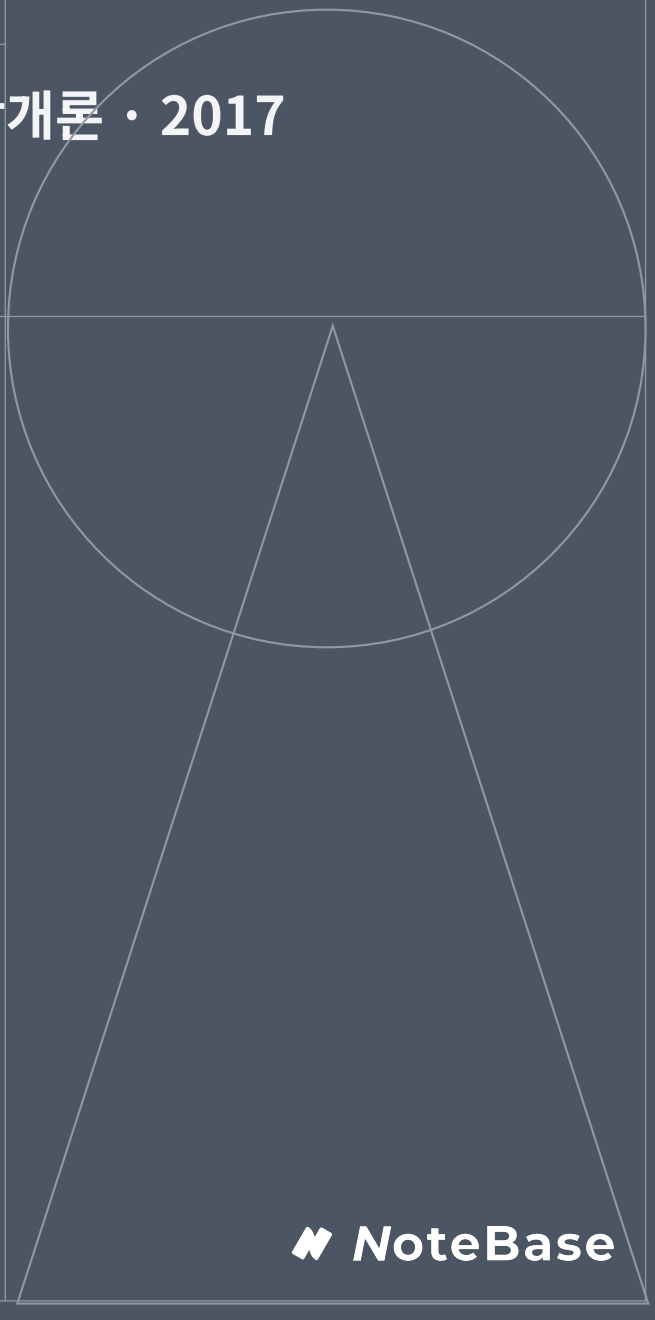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7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17

문 1. “화폐는 중립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명목소득의 변화가 없다.

②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한다.

③ 화폐공급량을 증가시키면 실질소득의 변화가 생긴다.

④ 화폐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실질소득과 명목소득 모두 변화가 없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화폐가 중립적이면 화폐공급량이 늘어도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고 물가가 상승**한다. 생산되는 재화·서비스의 양은 그대로인 채 가격이 오르므로 명목소득은 증가한다.

공통 해설

화폐의 중립성은 화폐공급량의 변화가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명목변수만 변화**시킨다는 뜻이다. 실질소득은 물가의 영향을 제거하여 재화·서비스의 양으로 평가한 소득이고, 명목소득은 현재 가격으로 평가한 소득이다. 이러한 중립성은 일반적으로 물가와 임금이 충분히 조정되는 장기에 성립하는 성질로 설명한다.

다른 실물 여건이 같을 때 화폐공급량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은 그대로이고 물가는 상승한다. 명목소득은 물가와 실질소득을 곱한 값이므로, 실질소득이 일정해도 **물가가 오르면 명목소득은 증가**한다. 따라서 화폐공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은 중립성과 부합하지만, 실질소득이 변한다거나 명목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다음 화폐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욕망의 상호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를 위해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구매력을 보관해 준다.

① (가): 교환의 매개수단, (나): 가치의 저장수단
② (가): 교환의 매개수단, (나): 회계의 단위
③ (가): 가치의 저장수단, (나): 교환의 매개수단
④ (가): 가치의 저장수단, (나): 회계의 단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화폐를 사용하면 서로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상대를 찾아야 하는 '욕망의 상호일치'가 필요 없으므로 **교환의 매개수단**에 해당한다. 구매력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은 **가치의 저장수단**이다.

대응 관계 해설

(가) 교환의 매개수단: 물물교환에서는 내가 가진 물건을 원하면서 동시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진 상대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욕망의 상호일치'이다. 화폐를 사용하면 물건을 팔아 화폐를 받은 뒤 그 화폐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어, **두 사람의 욕망이 서로 일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거래 상대를 찾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주는 설명은 교환의 매개수단에 대응한다.

(나) 가치의 저장수단: 화폐를 지금 모두 쓰지 않고 보유했다가 나중에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기능이 가치의 저장수단이다. 회계의 단위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시하여 비교·계산하게 하는 기능이므로, 구매력을 시간에 걸쳐 보관한다는 설명과 구별된다.

(가)는 교환의 매개수단, (나)는 가치의 저장수단이므로 ①의 짝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다음 실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들이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①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이러한 실업은 나타난다.
② 산업구조 재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③ 일반적으로 실업 보험 급여는 이러한 실업을 늘린다.
④ 정부의 실직자 재훈련 및 직장 알선 노력 등으로 이러한 실업은 줄어들 수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제시문은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설명한다. ②의 산업구조 재편으로 근로자의 숙련과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선지별 해설

제시문의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뒤, 자신의 능력과 선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① O: 완전 고용은 실업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경제 전반의 일자리가 충분해도 이직자가 새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② X: 산업구조 재편으로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줄고 새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근로자의 기술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 실업**이다. 마찰적 실업은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보다 구인·구직 정보를 얻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하는 실업이다.

③ O: 실업 보험 급여는 구직 기간의 생활비를 일부 보전하므로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이에 따라 구직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 기간을 늘릴 수 있어, 일반적인 이론에서는 마찰적 실업을 늘리는 요인으로 본다.

④ O: 직장 알선은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연결하여 **일자리를 찾는 시간을 줄인다**. 재훈련도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노동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구직자와 일자리의 연결을 촉진하여 마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문 4.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GDP의 변화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기업 A는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해 오다가,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새로운 기술로 바꾸었다. 그 결과 생산된 제품의 양은 같은데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나) 주부 B는 자신의 아이를 직접 돌봐 왔는데, 육아가 너무 힘이 들어 보모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하였다. 보모는 이를 소득으로 인식하여 세금을 신고하였다.

① (가): GDP는 변함이 없다., (나): GDP는 증가한다.
② (가): GDP는 변함이 없다., (나): GDP는 감소한다.
③ (가): GDP는 증가한다., (나): GDP는 증가한다.
④ (가): GDP는 증가한다., (나): GDP는 감소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GDP에는 **오염 감소에 따른 환경 개선분이 직접 반영되지 않으므로**, 생산량이 같은 (가)에서는 GDP가 변하지 않는다. (나)에서는 무급으로 하던 육아가 **임금을 지급하는 시장 서비스**로 바뀌어 GDP가 증가한다.

대응 관계 해설

GDP는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이다. 두 사례에서는 환경의 변화와 시장 거래 여부가 GDP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가) GDP는 변함이 없다: 기업 A의 제품 생산량은 그대로이고,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만 절반 이하로 줄었다. GDP는 오염 피해를 생산액에서 빼거나 환경 개선의 가치를 더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이 개선되어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어도, **오염 감소 자체로 GDP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나) GDP는 증가한다: 주부 B가 자기 아이를 직접 돌보던 무급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모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육아 서비스**가 생산되므로 그 서비스의 가치가 GDP에 포함된다. 같은 육아 활동이라도 무급 가사노동에서 유급 서비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GDP가 증가한다. 보모의 세금 신고는 이러한 소득이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GDP에 새로 포함되는 대상은 보모가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이다.

따라서 (가)는 'GDP는 변함이 없다', (나)는 'GDP는 증가한다'로 대응하며, 이는 ①의 조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A국은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에서 결정된 높은 임대료를 규제하기 위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단기와 장기 관점에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② 주택물량 부족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③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크고 장기적으로도 크다.

④ 주택물량 과잉 규모는 단기적으로 작으나 장기적으로는 크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상한은 수요량을 공급량보다 많게 만들어 **주택 부족**을 일으킨다.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의 조정이 어려워 부족 규모가 작지만, 장기에는 조정 폭이 커져 **부족 규모가 커진다**.

공통 해설

가격상한제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임대료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제도이다. 높은 임대료를 실제로 낮추려면 상한을 **시장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이때 낮아진 임대료에서 주택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진다. 이 차이가 주택 부족 규모이며,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주택 과잉과 구별된다.

단기에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수를 바꾸기 어렵고, 세입자도 거주 형태를 곧바로 바꾸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즉 임대료 변화에 반응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정도가 작다. 임대료가 낮아져도 수요량 증가와 공급량 감소가 제한되어 **주택 부족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장기에는 임대인이 수익성 하락에 대응해 임대주택의 신규 건설을 줄이거나 기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세입자도 낮은 임대료에 맞추어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등 주거 선택을 바꿀 시간이 생긴다. 이처럼 장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단기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하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커진다. 따라서 같은 가격상한이 유지되면 **주택 부족 규모는 단기에는 작고 장기에는 커진다**.

NoteBase

문 6. 다음은 비합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들어갈 효과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고가품일수록 과시욕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는 (㉠) 효과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고, 보통사람과 자신을 차별하고 싶은 욕망으로 나타나는 (㉡) 효과는 가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① ㉠: 밴드왜건(bandwagon), ㉡: 베블렌(Veblen)

② ㉠: 밴드 왜건(bandwagon), ㉡: 스놉(snob)

③ ㉠: 베블렌(Veblen), ㉡: 스놉(snob)

④ ㉠: 스놉(snob), ㉡: 밴드왜건(bandwagon)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고가품의 높은 가격이 과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베블렌 효과**이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고 남들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을 꺼리는 것은 **스놉 효과**이다.

빈칸별 해설

㉠ 베블렌(Veblen) 효과: 상품의 높은 가격을 부나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겨, 비쌀수록 그 상품을 더 소비하려는 현상이다. 지문의 '고가품일수록 과시욕에 따른 수요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높은 가격 자체가 과시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베블렌 효과에 해당한다.

㉡ 스놉(snob) 효과: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면 그 상품에 대한 자신의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지문에서 직접적인 영향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비**이다.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지만, 남들이 많이 소비할수록 자신도 따라 소비하려 하므로 스놉 효과와 방향이 반대이다.

㉠에 베블렌, ㉡에 스놉을 연결한 것은 ③이다.

NoteBase

문 7. 위험자산 K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24%와 28%이고, 무위험자산 F의 수익률은 4%이다. 이 두 가지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이 15%라면, 포트폴리오 P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① 14.0%

② 15.4%

③ 16.8%

④ 18.2%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은 변동하지 않으므로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에 비례**한다.
기대수익률 15%를 얻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55%이므로, 표준편차는 0.55 × 28% = 15.4%이다.

계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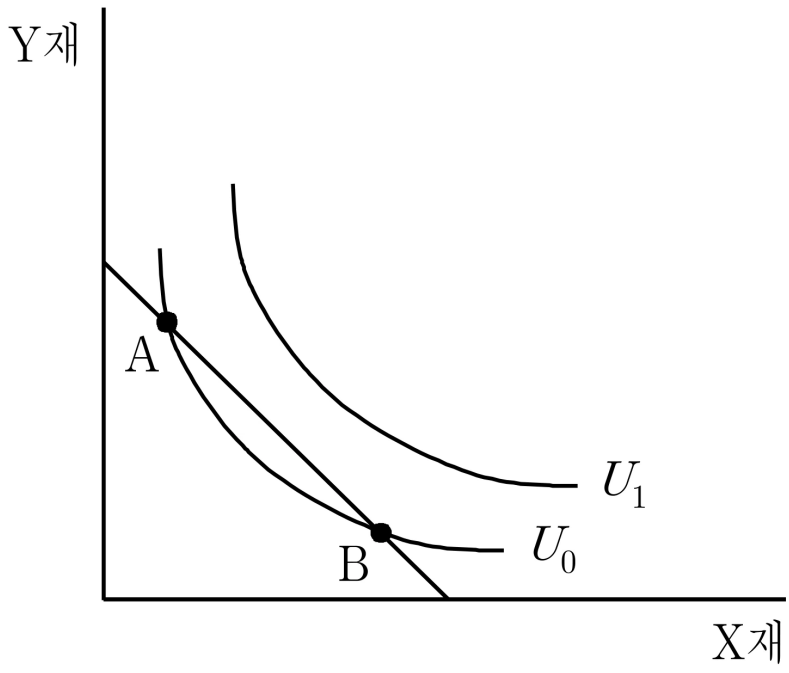
위험자산 K의 투자 비중을 w라 하면 무위험자산 F의 투자 비중은 $1-w$이다.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두 자산 기대수익률의 가중평균이므로 $15\% = w \cdot 24\% + (1-w) \cdot 4\%$이다. 이를 풀면 $w = \frac{15-4}{24-4} = 0.55$이다. 즉 전체 투자금의 55%를 K에, 나머지 45%를 F에 투자한다.

무위험자산 F의 수익률은 4%로 확정되어 있어 표준편차가 0이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변동은 **K의 수익률 변동에 투자 비중을 곱한 만큼**만 발생한다.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를 σ_P, K의 표준편차를 σ_K라 하면 $\sigma_P = |w|\sigma_K$가 성립한다. 이 문제에서는 K의 투자 비중이 양수이므로 0.55를 곱한다.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sigma_P = 0.55 \cdot 28\% = 15.4\%$이므로, ②의 15.4%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다음 그림은 소비자 甲의 예산선 및 무차별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한계대체율을 $-\frac{\Delta Y}{\Delta X}$로 정의한다)



① 한계대체율은 A점이 B점보다 크다.

② 무차별곡선 U_0에서의 상품묶음이 무차별곡선 U_1에서의 어떤 상품묶음보다도 효용이 작다.

③ 소비자 甲이 B점에서 소비하는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X재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Y재의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④ A점에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작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A점에서는 무차별곡선이 예산선보다 가팔라 한계대체율이 상대가격보다 크다. 따라서 X재의 1원당 한계효용은 Y재의 1원당 한계효용보다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계대체율은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X재를 한 단위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Y재의 양으로,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이다. 그림에서 같은 무차별곡선 위의 A점은 B점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므로** 한계대체율이 더 크다.

② O: 무차별곡선은 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묶음을 연결한 곡선이다. 두 재화의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높아지는 그림의 경우, 원점에서 더 멀리 있는 곡선일수록 효용수준이 높다. 따라서 U_1 위의 모든 상품묶음은 같은 높은 효용을 주고, U_0 위의 모든 상품묶음은 그보다 낮은 효용을 준다.

③ O: B점에서는 무차별곡선이 예산선보다 완만하다. 소비자가 X재를 조금 줄일 때 효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Y재의 증가량보다, 그 지출을 줄여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Y재의 양이 더 많다는 뜻이다. 따라서 예산선을 따라 **X재를 줄이고 Y재를 늘리면** 더 높은 무차별곡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여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이 같아지는 소비조합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④ X: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을 각각 MU_X, MU_Y, 가격을 각각 P_X, P_Y라고 하자. 한계대체율은 $\frac{MU_X}{MU_Y}$이고 예산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frac{P_X}{P_Y}$이다. A점에서는 무차별곡선이 예산선보다 가파르므로 $\frac{MU_X}{MU_Y} > \frac{P_X}{P_Y}$이다. 이를 1원당 한계효용으로 비교하면 $\frac{MU_X}{P_X} > \frac{MU_Y}{P_Y}$이므로, 선지의 '작다'는 **'크다'로 고쳐야 한다**. A점에서는 Y재에 쓰던 지출의 일부를 X재로 돌리면 효용을 높일 수 있다.

NoteBase

문 9.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 모두에 있어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ㄴ. 고정환율제도하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ㄷ. 변동환율제도하에서 자국의 경기안정화를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표준 모형에서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유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제약**되며, 재정확대의 효과는 통화량 증가로 뒷받침된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조정되므로 **국내 경기 안정을 위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정책 효과는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물가가 단기에 경직적인 소규모 개방경제의 표준 모형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고팔아 환율을 유지하며,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환율이 조정된다.

ㄱ. X: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중앙은행의 외환 매매를 통해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외화의 초과공급으로 자국통화 가치가 오르려 하면 중앙은행은 외화를 사들이고 자국통화를 지급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외화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외화를 팔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므로 통화량이 감소한다. 이는 별도의 국내 채권 매매로 통화량 변화를 상쇄하는 불태화정책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순수한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수급을 조정하므로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이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두 제도 모두에서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 O: 고정환율제도에서 재정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늘고 금리 상승 압력이 생겨 자본이 유입된다. 자국통화 가치의 상승을 막으려는 중앙은행의 외화 매입은 통화량을 늘려 **재정확대의 소득 증가 효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은 금리 하락과 자본 유출을 유발한다.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려고 외화를 팔고 자국통화를 회수하면 처음의 통화확대가 상쇄된다. 이 때문에 표준 모형에서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ㄷ. O: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특정 환율을 유지할 의무가 없어 **국내 경기 상황에 맞추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확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자본 유출과 자국통화 가치 하락이 나타나고,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 과정은 총수요와 소득을 늘려 경기 부양에 기여하며, 고정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통화 회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옳은 보기는 ㄴ과 ㄷ이므로, 두 보기를 모두 포함한 조합은 ④이다.

NoteBase

문 10. 내생적 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장이론의 대표 모형인 AK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고소득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수렴하게 된다.

② 저축률의 상승이 영구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③ 노동단위당 자본에 대하여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자본의 개념에 물적자본 외에 인적자본을 포함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K 모형에서는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성장률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지 않으므로, 저소득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여 고소득국을 따라잡는 수렴은 모형의 일반적인 결론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AK 모형은 **저소득국의 자동적인 추격과 수렴을 예측하지 않는다**. 자본이 적더라도 자본 한 단위를 추가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이 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률·생산성·감가상각률·인구증가율이 같으면 초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같은 성장률을 보이며,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유지된다. 따라서 저소득국의 성장률이 더 높다는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② O: 저축은 투자로 이어져 자본을 축적하게 한다. AK 모형에서는 자본이 늘어도 그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장기 성장률도 영구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저축률 상승이 장기 소득수준만 높이고 장기 성장률은 바꾸지 않는 솔로 모형과 구별된다.

③ O: 노동단위당 생산함수는 $y = Ak$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y는 노동단위당 생산량, k는 노동단위당 자본, A는 양의 생산성 계수이다. 자본 한 단위를 추가할 때 생산량은 항상 A만큼 늘어나므로, 자본이 축적되어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일정하다**. 따라서 노동단위당 자본에 대한 수확체감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O: AK 모형의 자본은 기계·설비 같은 물적자본뿐 아니라 **인적자본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한다. 인적자본은 교육·훈련 등으로 축적된 지식과 숙련을 뜻한다. 물적자본과 함께 이러한 생산능력의 축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한다.

NoteBase

문 11.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생산 증가 효과

② 재정수입 증가 효과

③ 사회후생 증가 효과

④ 국제수지 개선 효과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관세로 국내 생산자와 정부가 이익을 얻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국의 기본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손실이 생산자 이익과 정부 수입의 합보다 커서 **사회후생이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상승할 때 나타나는 기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O: 관세로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오르면 경쟁하는 국내 상품의 가격도 상승한다. 국내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국내 생산량을 늘린다**. 이를 관세의 국내산업 보호 효과라고 한다.

② O: 관세를 부과한 뒤에도 수입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수입품에서 **관세 수입**을 얻는다. 종량세라면 단위당 관세액에 수입량을 곱한 금액이 정부 수입이다. 다만 관세가 너무 높아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면 관세 수입도 발생하지 않는다.

③ X: 관세의 일반적 효과는 사회후생 증가가 아니라 **사회후생 감소**이다. 국제가격이 주어진 소국의 기본 모형에서 사회후생은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정부의 관세 수입을 합하여 평가한다. 관세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잉여는 줄고 생산자잉여와 정부 수입은 늘지만, 소비자의 손실을 모두 보충하지는 못한다. 더 저렴한 수입품 대신 생산비가 높은 국내 생산이 늘어나는 생산 왜곡과,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소비 왜곡 때문에 순손실이 남는다.

④ O: 관세로 국내 소비가 줄고 국내 생산이 늘면 그 차이인 **수입량이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수입대금의 해외 지급이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를 관세의 국제수지 개선 효과라고 한다. 이는 수입 억제에 따른 효과를 뜻하며 환율이나 수출의 변화까지 고려해 국제수지가 반드시 개선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2. 다음 표는 A국의 명목 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와 가장 작은 연도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연도	명목 GDP(단위 : 억 원)	GDP 디플레이터
2010	5,000	100
2011	5,200	105
2012	5,600	110

①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 2012년도, 실질 GDP가 가장 작은 연도: 2011년도

②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 2012년도, 실질 GDP가 가장 작은 연도: 2010년도

③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 2011년도, 실질 GDP가 가장 작은 연도: 2010년도

④ 실질 GDP가 가장 큰 연도: 2010년도, 실질 GDP가 가장 작은 연도: 2011년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명목 GDP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다. 이렇게 구한 실질 GDP는 2012년이 약 5,090.91억 원으로 가장 크고, 2011년이 약 4,952.38억 원으로 가장 작다.

NoteBase

계산 과정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명목 GDP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하면 기준연도 가격으로 평가한 실질 GDP를 구할 수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지수이므로, 실질 GDP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실질 GDP=명목 GDPGDP 디플레이터⋅100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 물가를 100으로 나타낸 지수**이므로 100을 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의 명목 GDP 단위가 억 원이므로 계산한 실질 GDP의 단위도 억 원이다.

2010년: $\frac{5{,}000}{100} \cdot 100 = 5{,}000$억 원이다. 디플레이터가 100이므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

2011년: $\frac{5{,}200}{105} \cdot 100 \approx 4{,}952.38$억 원이다. 명목 GDP는 2010년보다 크지만,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GDP는 2010년보다 작다**.

2012년: $\frac{5{,}600}{110} \cdot 100 \approx 5{,}090.91$억 원이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해도 실질 GDP가 2010년과 2011년보다 크다.

실질 GDP는 2012년, 2010년, 2011년 순으로 크다. 따라서 가장 큰 연도는 2012년, 가장 작은 연도는 2011년이며, 이 짝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3. 소비자 甲은 주어진 소득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품묶음을 선택한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3배 오르고, 소비자 甲의 소득도 3배 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① 정상재의 소비만 증가한다.

②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③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④ 기존에 소비하던 상품의 수요는 불변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모든 상품의 가격과 소득이 똑같이 3배가 되면 **실질구매력과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효용극대화 상품묶음을 그대로 소비한다.

공통 해설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상품묶음은 소득과 상품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모든 상품의 가격이 3배가 되면 어떤 상품묶음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지출도 3배가 된다. 그런데 소득 역시 3배가 되므로, 이전에 살 수 있던 상품묶음은 여전히 살 수 있고 이전에 살 수 없던 상품묶음은 여전히 살 수 없다. 즉, **구입 가능한 상품묶음의 범위가 그대로**이다.

또한 모든 가격이 같은 비율로 오르므로 상품 간 상대가격도 변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선호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상품묶음도 같으므로 기존의 효용극대화 선택이 유지되어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명목소득의 증가가 실질구매력의 증가를 뜻하지 않으므로** 정상재의 소비만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아니다.

NoteBase

문 14. 어떤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화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영화관 이용자를 A와 B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기업이 영화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한계비용은 10이고, A집단과 B집단의 수요함수는 각각 $Q_A = 10 - \frac{1}{2}P_A$와 $Q_B = 14 - P_B$이다.)

① 영화관 이용자는 두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고, 이용자 간의 거래가 불가능해야만 가격차별이 가능하다.

② 독점기업은 A집단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B집단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다.

③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A와 B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이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A집단에서 15, B집단에서 12이므로 **A집단에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②는 두 집단의 가격 관계를 반대로 설명했다.

선지별 해설

① O: 집단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받으려면 기업이 **집단을 구분하고 이용자 간 재판매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이용자가 높은 가격을 적용받는 이용자에게 되팔 수 있다면,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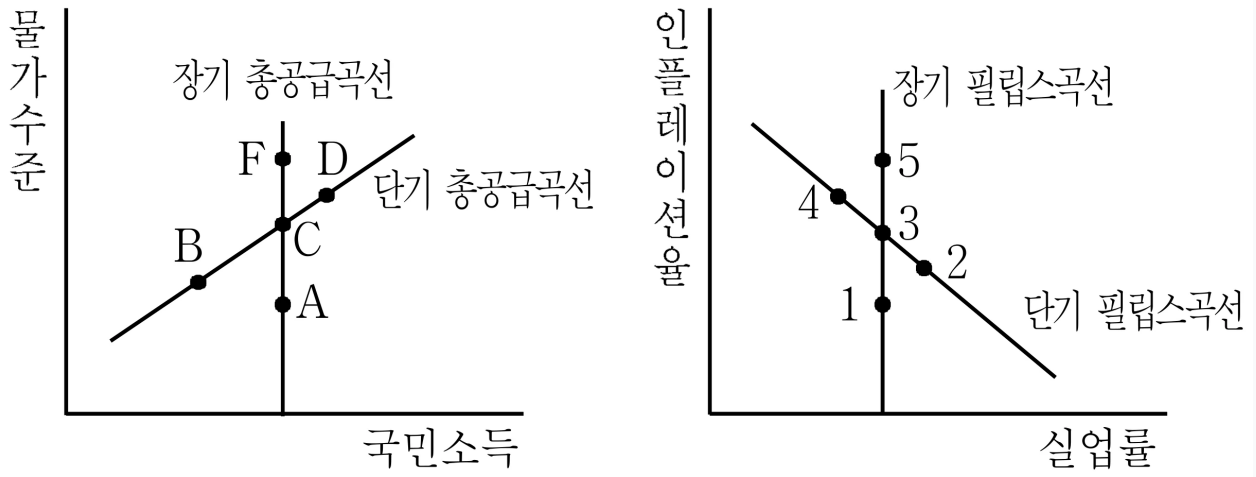
② X: 각 집단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 10과 같아지는 판매량을 구한 뒤, 그 판매량을 수요함수에 대입하여 가격을 정한다. A집단의 역수요함수는 $P_A = 20 - 2Q_A$이고, 총수입은 $TR_A = 20Q_A - 2Q_A^2$이므로 한계수입은 $MR_A = 20 - 4Q_A$이다. 따라서 $20 - 4Q_A = 10$에서 $Q_A = 2.5$, $P_A = 20 - 2 \cdot 2.5 = 15$가 된다. B집단은 $P_B = 14 - Q_B$, $TR_B = 14Q_B - Q_B^2$이므로 $MR_B = 14 - 2Q_B$이다. 따라서 $14 - 2Q_B = 10$에서 $Q_B = 2$, $P_B = 14 - 2 = 12$가 된다. 선지와 달리 **A집단에는 높은 가격, B집단에는 낮은 가격**을 부과해야 이윤이 극대화된다.

③ O: 가격차별이 가능하면 기업은 집단별 수요에 맞추어 가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모든 집단에 같은 가격을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격차별을 허용한 상태에서 극대화한 이윤은 단일가격일 때보다 작아지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는 **집단별 이윤극대화 가격이 15와 12로 다르므로**, 하나의 가격으로 두 집단의 이윤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없다. 집단별로 가격을 달리하면 단일가격보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O: 한 집단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판매량을 늘릴 때 이윤이 증가하고, 작으면 판매량을 줄일 때 이윤이 증가한다. 두 집단 모두 양의 판매량에서 이윤이 극대화되므로 **각 집단의 한계수입이 공통 한계비용과 같아져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한계비용이 10이므로 $MR_A = MR_B = 10$이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그림은 장단기 총공급곡선과 장단기 필립스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경제가 'C'점과 '3'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의 감소로 총수요곡선이 이동하였을 때, 새로운 단기 균형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B와 1

② B와 2

③ D와 2

④ D와 4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예상하지 못한 화폐공급 감소는 총수요를 줄인다. 단기에는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하락**하여 C에서 B로 이동하고, **실업률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여 3에서 2로 이동한다.

NoteBase

도식 해설

정책 충격과 단기 조정: 화폐공급이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이므로 단기에는 기대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아직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단기 총공급곡선과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균형점이 이동한다.

총공급 도식: 가로축은 국민소득, 세로축은 물가수준이다. 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곡선과의 교점도 왼쪽 아래로 이동한다. 따라서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모두 낮아지는 **C → B**가 새로운 단기 균형의 변화이다. D는 C보다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이 모두 높은 점이므로 총수요 감소의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립스곡선 도식: 가로축은 실업률,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이다. 총수요 감소로 생산과 고용이 줄면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약해져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 이는 우하향하는 단기 필립스곡선에서 오른쪽 아래로 움직이는 **3 → 2**에 해당한다. 1은 3과 실업률이 같고 기존 단기 필립스곡선 위에도 없으므로 이번 충격 직후의 단기 균형이 아니다. 4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점으로, 필요한 이동 방향과 반대이다.

따라서 두 도식의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B와 2이며,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

문 16.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조세를 각각 Y, C, I, G, NX, T라 표현하자. 국민경제의 균형이 다음과 같이 결정될 때, 균형재정승수(balanced budget multiplier)는?

$C = 100 + 0.8(Y - T)$
$Y = C + I + G + NX$

① 0.8
② 1
③ 4
④ 5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 정부지출의 직접적인 수요 증가가 조세로 인한 소비 감소보다 크다. 이 순증가분에 소비의 연쇄 증가가 더해져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액만큼 늘어나므로 **균형재정승수는 1**이다.

계산 과정

균형재정승수는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변화시킬 때**, 정부지출 변화액에 대한 균형국민소득 변화액의 비율이다. 투자와 순수출은 일정하게 두며, 소비함수에서 한계소비성향은 0.8이다.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를 Δ라 하면 균형재정 변화의 조건은 $\Delta T = \Delta G$이다.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변화에 따라 $\Delta C = 0.8(\Delta Y - \Delta T)$만큼 변한다. 균형식에서 투자와 순수출의 변화는 없으므로 $\Delta Y = \Delta C + \Delta G$이다. 이를 결합하면 $\Delta Y = 0.8(\Delta Y - \Delta T) + \Delta G$이고, 정리하면 $0.2\Delta Y = \Delta G - 0.8\Delta T$이다. 우변은 국민소득의 추가 변화가 일어나기 전, **재정 변화가 총수요에 직접 미치는 순효과**이다.

같은 금액을 지출하고 걷으므로 $\Delta T = \Delta G$를 대입한다. 그러면 $0.2\Delta Y = (1 - 0.8)\Delta G = 0.2\Delta G$이므로 $\Delta Y = \Delta G$이다. 정부지출 1단위 증가는 수요를 1단위 늘리지만, 조세 1단위 증가는 소비를 0.8단위 줄여 최초 수요는 0.2단위 증가한다. 이후 소비의 연쇄 증가를 반영한 균형국민소득 증가액은 $\frac{0.2}{1-0.8} = 1$단위이다.

따라서 균형재정승수는 $\frac{\Delta Y}{\Delta G} = 1$이며, ②의 1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7. 완전경쟁시장에서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고 하자. 정부는 X재 1단위당 t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하고, X재의 공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감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②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③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④ 공급자가 세제개편 후에 받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물품세가 줄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세금을 낸 뒤 받는 가격 사이의 **격차가 작아진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소비자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공통 해설

공급자가 물품세를 납부하면 소비자에게 받은 가격에서 단위당 세금을 뺀 금액이 공급자의 세후 수취 가격이다. 따라서 **소비자 지불 가격과 공급자 세후 수취 가격의 차이**는 단위당 물품세와 같다.

물품세가 감소하면 공급자는 같은 세후 수취 가격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지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급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만나는 새 균형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거래량이 증가**한다.

한편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세후 가격은 우상향하는 세전 공급곡선에서 결정된다. 늘어난 거래량을 공급하려면 더 높은 세후 수취 가격이 필요하므로 **공급자의 세후 수취 가격은 상승**한다. 세금 감소의 혜택이 소비자에게는 지불 가격 하락으로, 공급자에게는 세후 수취 가격 상승으로 나뉘는 것이다.

NoteBase

문 18. IS-LM 모형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LM 곡선이 수직선일 때, 재정정책은 통화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② IS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③ LM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재정정책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작아진다.

④ 유동성함정에서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LM 곡선이 가파를수록 재정확대로 국민소득이 늘어날 때 이자율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커져** 재정정책의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물가가 일정한 단기 IS-LM 모형에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의 확장적 정책 효과를 비교한다. 재정확대는 IS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이 과정에서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여 재정확대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것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① X: LM 곡선이 수직이면 재정확대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국민소득은 늘지 않고 이자율만 상승한다. 정부지출 증가 등이 민간투자 감소로 전부 상쇄되는 **완전 구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통화량을 늘리면 수직인 LM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이다.

② X: 소비 성향 등 다른 조건이 같을 때, 투자의 이자율 민감도가 낮을수록 IS 곡선이 가파르다. 이 경우 재정확대로 이자율이 상승해도 **민간투자가 덜 감소**하므로 구축효과가 작다. 따라서 같은 규모의 재정확대에 따른 국민소득 증가폭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③ O: IS 곡선이 같은 상태에서 LM 곡선이 가파를수록, 동일한 재정확대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자율 상승폭은 커지고 국민소득 증가폭은 작아진다. 국민소득 증가로 늘어난 화폐수요를 주어진 화폐공급 아래에서 조정하려면 이자율이 더 크게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가 커져** 재정정책의 효과가 줄어든다.

④ X: 유동성함정에서는 LM 곡선이 수평이며, 화폐공급을 늘려도 사람들이 추가 화폐를 그대로 보유하여 이자율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확대가 투자와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는 없다. 반면 재정확대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 없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므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NoteBase

문 19. 정상적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하에서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어진 수요곡선하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② 주어진 공급곡선하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③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④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거래 감소로 사라지는 잉여를 빠뜨렸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하면 정부의 조세수입에 **경제적 순손실까지 더한 금액**이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수요곡선과 단위당 세금이 같을 때,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생산자가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공급량을 조정하는 정도가 작다. 따라서 세금 부과로 인한 **거래량 감소가 작아져**, 성사되지 못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도 작다.

② O: 공급곡선과 단위당 세금이 같을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 반응하여 수요량을 줄이는 정도가 작다. 따라서 **세금 부과 후에도 거래량이 덜 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작다.

③ O: 정상적인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곡선에서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격차를 만든다. 세금 부과 전보다 **소비자 지불가격은 오르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내려가며**, 거래량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한다.

④ X: 소비자잉여 감소분 + 생산자잉여 감소분 = 조세수입 + 경제적 순손실이다. 조세수입은 민간의 잉여가 정부로 이전된 부분이지만, 경제적 순손실은 거래량이 줄어들어 **소비자·생산자·정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잉여**이다. 따라서 두 잉여 감소분의 합은 조세수입보다 경제적 순손실만큼 크다.

NoteBase

문 20. 국제무역에서 립진스키의 정리(Rybczynski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 국가는 그 나라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어 그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게 된다.

② 국제무역은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이도 국가 간에 요소가격의 균등화를 가져올 수 있다.

③ 어떤 재화의 가격상승은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증가시키고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을 하락시킨다.

④ 어떤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절대생산량은 감소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립진스키 정리는 **재화의 상대가격이 일정할 때 생산요소 부존량의 증가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증가한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늘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

공통 해설

립진스키 정리는 **'생산요소 부존량 변화 → 재화별 생산량 변화'**의 관계를 설명한다. 부존량은 한 경제가 보유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양이다. 두 재화와 두 생산요소가 있는 표준 모형에서 재화의 상대가격과 생산기술이 일정하고, 다른 요소의 부존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다. 또한 생산요소가 산업 사이에서 이동하여 완전고용되고, 두 재화를 모두 계속 생산하는 범위에서 성립한다. 이때 한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그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자본집약재와 노동집약재를 생산하는 경제에서 자본만 늘어났다고 하자. 자본집약재의 생산을 확대하려면 추가 자본뿐 아니라 노동도 필요하다. 노동 총량은 그대로이므로 노동집약재 부문의 노동이 자본집약재 부문으로 이동한다. 노동집약재 부문이 축소되면서 자본도 함께 이동하여, 자본집약재 생산량은 늘고 노동집약재 생산량은 줄어든다. 다른 재화의 생산은 단순히 비중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 자체가 감소**한다.

후보를 구별하는 기준도 변화의 원인과 결과이다. 국가 간 요소의 상대적 풍부함에 따른 수출입 방향, 무역에 따른 국가 간 요소가격의 균등화, 재화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요소가격 변화는 이 정리가 설명하는 관계와 다르다. 요소의 부존량 증가를 출발점으로 삼아 두 재화의 절대생산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고 설명한 내용이 립진스키 정리에 해당한다.

NoteBase